

주마가편... 불씨 살린 벤처에 '총체적 지원'

(走馬加鞭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

'제2 벤처 붐' 대책 살펴보니

창업법인 10만, 총 벤처 3.7만개
신규벤처에 연간 5조 투자 목표
4년간 12조 스케일업펀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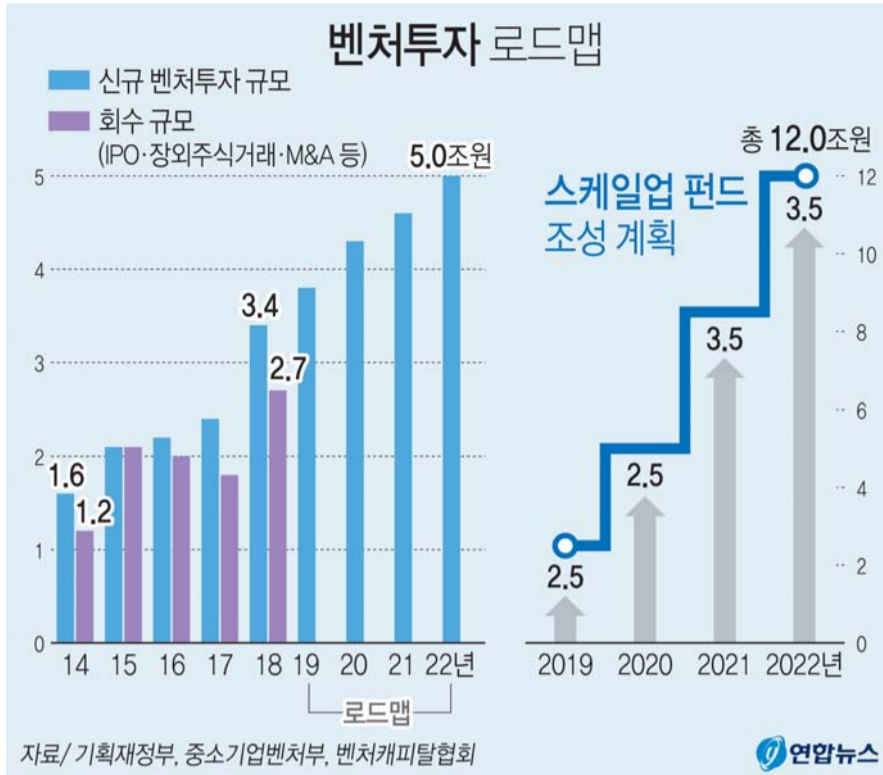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현재의 3조 4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하고, 벤처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된 이번 발표는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발표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에 대해 벤처기업 협회가 내놓은 논평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법인은 10만개를 훌쩍 넘었다. 벤처기업도 3만7000개에 달했다. 양적으로 보면 이들 수치는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같은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번 대책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기존의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성이 높아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초기·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에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 기능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투자자(VC)와 협업을 통해 신뢰

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VC와 스타트업 업계간 협업체널을 마련해 기업은행의 스케일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성장 유망 적자기업 특별보증을 시범 운영하고, 지식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해 IP 펀드를 2배로 늘리고 IP 담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즉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후위 투자로 결정된 지분 가치로 선위 투자 가치를 산정, 창업 초기에 투자자의 과도한 지분 요구 등 불필요한 마찰을 막을 수 있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해 일반, 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의 우려가 없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 의료기관에 이들이 입주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상경험이 우수한 병원 5곳에 개방형 실험실도 신설한다.

개인 건강과 연구데이터를 공유해 스타트업의 서비스개발도 지원하고, 바이오·의료 정책펀드에 6000원을 투자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4월 금융규제 테스

트베드(시험장)를 조기에 확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 스타트업 서비스개발의 문턱을 낮춰줄 방침이다.

금산법, 은행법 등도 개정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완화하고, 핀테크 전용 펀드로 150억원을 할애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 5~10년 안에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50여개를 발굴해 육성하는 '미래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제조 창업기업은 부담금 면제항목과 기간을 늘리고, 창업지원 사업에서도 우대한다.

공공기관의 분사 창업을 촉진하고자 벤처 특별법을 개정,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5년 이내 창업 휴·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대학·연구소 내 기술창업 기업에 올해 1900억원을 보증한다. 230억원 규모의 대덕특구펀드도 만든다.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틱스(TIP S)도 3단계(Pre-TIPS·TIPS·Post-TIP S)로 고도화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내에 창출하는 등 규제도 재설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경제활력 위해 특단의 대책 시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국무총리 예방 최저임금 소상공인 구분적용 등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이날 연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중기중앙회 서병문 부회장과 노상철 부회장,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배소웅 회장이 동행했다.

취임인사를 겸한 이날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인들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기중앙회

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제 26대 중기중앙회장에

당선, 이달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지난 4월 뿌리산업 중 하나인 금형 제조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5일 문화상 국회의장과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리를 함께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文, ‘韓·中 공동 인공강우’ 지시

미세먼지 긴급대책

“추경 긴급편성 해서라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에게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를 지시했다. 심각한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긴급대책인 셈이다. 실제 수도권은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시행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환경장관회의 때 이미 합의했다”며 “인공강우는 중국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먼지가 ‘상하이로 간다’고 주장한다.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를 지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경은 서울과 경기 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긴급보고 중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 /청와대

역을 합친 만큼 넓은 땅이다. (그 땅에서 중국은)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게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공동 인공강우를 비롯해 ▲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한중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시행,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우승훈 기자 dn114@

하반기 ‘학교급식 김치’ 표준 나온다

내년 김치품질 표시제 도입 등 농식품부 ‘김치산업 육성방안’

정부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김치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김치품질표시제가 도입되고, 현재 30일인 유통기한을 60일로 늘리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산 김치의 품질을 개선해 시장을 넓히고, 외국산 김치의 수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김치 수출액이 911만달러(약 103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산 저가 김치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라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하반기 중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개발·보급한다.

이를 통해 김치의 숙성도, 산도, 염도, 대장균 기준을 설정한 후 학교급식김치 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치품질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김치의 맛과 숙성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하반기에 ‘절임 배추 위해 관리 지침’도 마련해 주산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 배추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김치류에 사용된 소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김치의 원산지자율표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내 원료를 95% 이상 쓴 경우 ‘국내제조’로, 100% 사용 시 ‘국내산 100%’ 등으로 표시가 개선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해수부, 국내 첫 ‘참치양식’ 펀드 출시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실물 양식 투자펀드인 ‘BNK 참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1호’가 출범함에 따라 6일 부산 BNK금융지주 본사에서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참치1호펀드 출범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수산업 2030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치1호펀드는 BNK금융지주 산하 6개 계열사가 40억 원을 출자(선순위)하

고, 남평참다랑어영어조합법인이 10억 원을 출자(후순위)해 2019년 3월부터 3년간 총 50억 원을 참치양식에 투자하게 된다.

이 투자금은 남평이 운영하는 외해양식장의 참치 종자(10kg 내외 크기의 어린 참치) 구입비와 사료비 등 3년간의 운영비에 조달된다. 이후 남평이 이 양식장에서 50kg 이상으로 키워낸 참치를 출하한 판매대금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